

OPINION

2025년 3월 4일 화요일

기고

대한민국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남도는 대한민국 김 생산의 중심지로, 전체 김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김 산업은 최근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수직 성장세를 보였지만, 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어민들이 너도나도 김 양식에 뛰어들어 올해 가격 폭락을 가져왔다.

면적이 늘고 해수온도 좋은 조건이 유지되면서, 과잉 생산된 물김은 결국 산지 위판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으며, 제때 처리되지 못해 다시 바다로 버리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 버려진 물김이 연근해로 흘러들어 펼쳐 놓은 그물에 걸리면서 어선어업의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물김 위판량은 약 7만 9000t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급격히 증가한 물김의 kg당 위판 금액은 874원(45%↑), 중순에는 635원까지 급락해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김 소매가격은 작년보다 1.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물김은 생물이기 때문에 당일 경매를 통해 판매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과잉 생산으로 한정된 가공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다 보니 더욱 많은 양이 폐기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수치로만 따져보더라도 지난해 조성된 신규 양식장 규모는 전국 2700ha지만 가공공장은 영세 시설과 노후화 등으로 전국 308개, 그 가운데서도 45개 업체가 폐업했고 14개 업체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물김 폐기량만 전국 5690t에 달한다.

단편적으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한민국 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면허·무허가 불법 김 양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무면허·무허가 불법 김 양식은 단순히 불법 행위자 아니라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조류 소통을 방해하며, 선박 진로를 차단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붕괴와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 불법 양식 및 어업에 대한 처벌은 적법 시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

분 내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부족하여 불법 양식 행위를 근절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처벌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한 번의 위반도 용납되지 않으며, 재범 시 더욱 강한 처벌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불법 양식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 준수를 도모하고, 불법 어민들이 합법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준법 어민들의 보호하는 정책의 기초를 지켜내야 한다.

또 준법 양식어민에게는 재정지원, 스마트 환경 및 양식 기술 지원, 가공·유통 및 판로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규칙한 바다의 양식 환경 속에서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맞는 수급을 대비하기 위해 물김을 정부가 비축해 수급 부족과 비생산 시기인 4~9월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김 산업이 세계적인 K-푸드로 자리 잡기까지는 준법 어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깨닫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조속히 불법 양식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책과 실효적인 K-김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이 합법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어업활동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제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철 궤양 제거가 답이다

박인구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과수화상병 예방은 궤양 제거부터 시작해야 한다. 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나무가 봄에 탄 듯한 증상을 보이며 급격히 전염된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2024년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2개 농가에서 86.9헥타르(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농가 수는 31%, 발생 면적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상병은 개화기 이후부터 여름철까지 급격히 확산된다.

감염은 바람과 비를 통해 퍼지기도 하며, 곤충과 작업자의 손, 오염된 도구를 매개로 쉽게 전파된다. 또한 가지 치기나 폭풍으로 인한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화상병이 발생한 나무는 가지와 잎이 급격히 갈변하며 마르는데,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병해 특성상 감염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수화상병 예방이다. 감염된 나무의 가지와 줄기에 남아 있는 궤양이 병원균의 월동 장소가 되어 봄철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절기에 철저히 궤양을 제거함으로써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겨울철 궤양 제거를 위해서는 먼저 감염 부위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감염된 줄기나 가지는 검게 변하거나 움푹 들어간 형태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병든 조직에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부위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가지치기 도구는 락스(10% 희석액) 또는 알코올(70%)로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염된 가지는 건강한 조직에서 최소 30~50cm 이상 아래에서 잘라내야 한다. 제거된 가지는 즉시 불에 태우거나 땅속 깊이 매립해 병원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큰 가지를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면을 보호제로 도포해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겨울철 궤양 제거 외에도 화상병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개화기에는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방제 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화 초기, 만개기, 낙화 후 3회에 걸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강우 전후로 살포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나무의 통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예방 조

치 중 하나이다.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햇빛이 나무 내부까지 골고루 들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 병원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무가 과도하게 울창하면 습도가 높아져 병원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으므로, 통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작업 중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자가 여러 나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병원균을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할 때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다룬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한 나무에서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도구를 소독한 후 다른 나무로 이동해야 한다.

화상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감염이 확인된 나무는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감염된 나무는 반드시 제거해 파쇄 후 소각해야 하며, 감염 발생 지역 주변 100m 이내의 나무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화상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병해이다. 겨울철 궤양 제거를 철저히 하고, 개화기 방제 및 작업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신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과수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면 화상병으로부터 과수를 보호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수첩

1919년 3월 1일 함성으로 다시 하나되길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과거 혹독한 겨울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과 햇살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조선(대한민국)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미독립선언서의 일부다.

106년 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 민족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만세’를 목 놓아 외쳤다.

그날의 함성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매년 3월의 첫 날은 조국 광복의 뿌리인 3·1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특히 3·1 운동은 ‘평화’, ‘비폭력’, ‘민주주의’가 빛난 독립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삼일절은 1919년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운동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전국이 두 동강이 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순국한 선인들의 희생은 온대간 데 없고, 나라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전례 없는 혼란과 위기를 겪으며, 탄핵 심판을 놓고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무 집행의 위헌·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만간 결론 난다. 결과에 따른 반발은 불 보듯 뻔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106년 전 조국의 자유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화합해 비상계엄, 정치적 혼란, 국민 간의 대립이 끝나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산불 예방에 함께 힘써야

최근 10년간(2015~2024년) 통계에 따르면 37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39%), 논·밭두렁 등 소각(30%), 건축물화재 비화(25%), 담뱃불 실화(6%)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97%)했고, 월별로는 3월 99건으로 최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인재(人災)다. 입산물 채취 및 산행인구 증가와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행위나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투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근과 논·밭두렁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태워선 안된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초기 화재라면 외투 등으로 덮어 진압하면 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더해지면 진화를 위해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한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주민과 행정기관이 하나가 돼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시기다.

한선근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사설

광주 ‘차없는 거리’ 성공하길

광주시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도시(대·자·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5개 자치구 주요 도로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 도로에 자동차 통행을 제한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지난 1월 22일 ‘대·자·보 도시’의 첫 걸음인 포장마차가 집중돼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을 자동차가 없는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청춘 밋포차 광장’으로 전면 개방했다.

‘청춘 밋포차 광장’은 자동차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걷고 싶은 길로 연결한 것으로 앞으로 이 곳에서 다양한 문화공원이 펼쳐진다.

또 광주공원, 회경루,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등 주변 문화자원과 앙림동·동명동·서남동 등 원도심과도 연결해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앞으로 자치구와 함께 금남로, 충장로4·5가 충장도깨비여름비어축제, 청년상생마켓, 지구의 날, 품앗이동 소통테마길, 군분로 토요일야시장, 백운광장 토요일야시장, 전남대 후문 대학로, 광산 세계 야시장, 1913송정역시장, 삼무금융시장 등 광주지역 13개 도로에 차없는 거리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차없는 거리’조성 효과는 일부 지역 시범운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남구 군분로 무등시장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및 야시장을 운영한 결과, 방문객 유입과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체류기간 20분 이상인 방문객이 총 6만4190여명이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방문객 3만8845명보다 65% 증가한 수치다.

또 소비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7억9400만원)보다 2억1700만원(27.4%)이 증가한 총 10억1100만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지역 상인들은 아직도 “이같은 정책이 상가 매출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없는 거리 조성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고환율시대 지역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0월 1361원 수준에서 시작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2월 말 현재 1462원까지 오른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고환율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더해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데 앞으로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환율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수출입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결과, 60% 가까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생산단가 상승(27.0%)’이 가장 많았으며 ‘수입결제시 환차손 발생(20.0%)’, ‘해외거래처 납품단가 인하 압박(7.0%)’, ‘운송비 부담 가중(5.0%)’ 등이었다.

이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 과제로는 ‘세제 감면 확대(49.0%)’, ‘정책금융 지원 확대(47.0%)’, ‘물류비 지원(42.0%)’, ‘R&D 지원 확대(14.0%)’ 등을 꼽았다고 한다.

이들이 원하는 적정환율은 ‘1300원 이상 1350원 미만(35.0%) 수준’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익분기점 환율 또한 ‘1300원 이상 1350원 미만(28.0%)’이 가장 많았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중기 3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환율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알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체 기업의 51.4%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수입만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82.8%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고환율 국면이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환리스크 관리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여균수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